

12.2조 추경 심사 속도… 지역화폐·예비비 등 날선공방

국회, 28~29일 질의 내달 1일 의결
영남권 산불 재해·재난 대응에 3조
AI 강화에 3조, 소상공인 지원 4조

국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예비비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특위의 허영 민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30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연다. 이후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각 상임위는 이날부터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 지원 4조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에 나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날선 공방을 벌였

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상생패이백 사업 1조37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용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0만개고 중소기업이 596만개”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소상공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

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을 왜 안 넣었느냐”며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소상공인에게 고루 고루 혜택이 가는게 아니라 학원 등 일부 업종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상권별 양극화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의(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살펴봐달라”고 제안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며 “그보다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예비비 증액 추진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예비비 배정·집행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

다. 정부가 그간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걸 지적한 셈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다른 부처는 예비비 심사 시 자료를 제출한다면서 “기재부는 예비비 자료를 준 적이 있느냐. 제대로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예비비를 또 늘리겠다고 하고, 예비비 삭감했다고 국회를 비판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비 50%를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민주당 측은 중소기업부가 제출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 예산에 대해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지원이 아닌 성장 유도를 위한 지역화폐 등의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일부 자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영 부담과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텃밭’서 대세론 굳히나

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23일부터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전국 권리당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 당심이 ‘대세론’을 구가하는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이날부터 진행된다. ARS 투표는 24~25일 진행되며,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어 사흘간의 투표를 마무리한다.

호남권의 권리당원은 37만명 정도로, 전국 권리당원 110만명 중 약 34%에 달한다. 지난주에 이미 투표를 마친 충청·영남권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다음으로 당원 규모가 크다. 이 때문에 호남권 결과에 각 후보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호남 지역의 극적인 승리를 계기로 대역전극을 보여주고, 후보로까지 선출된 바 있다. 호남의 선택을 받으면 당의 선택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어,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현재 충청·영남권 투표 결과와 누적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 89.56%, 김경수 후보 5.17%, 김동연 후보 5.27%이다. 이에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고 있지만, 이 후보 측은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상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호남권 권리당원 37만명 34% 달해
24~25일 온라인, 26일 ARS 투표**

**이재명, 김제 새만금·농기원 찾아
김경수, ‘호남권 메가시티’ 등 약속
김동연, 5·18정신 헌법수호 등 공약**

특히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경선 당시 광주·전남 경선 투표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근소한 차이로 밀려 2위를 한 바 있다. 이에 호남권 경선에서 대세론을 확고히 굳힐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호남권 경선이 시작되면서 세 후보는 호남 당심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오는 24일부터 1박2

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 24일엔 전북 김제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재생 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어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전일빌딩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5·18 유족 등이 참석한다. 25일에는 전남 나주의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갖는다.

김경수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다.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의 전북도당을 찾아 당원들과 만났고, 광주 양동시장 방문·광주시당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전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의대 신설, ‘호남권 메가시티’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수호’를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날 한 방송에서 “5·18 정신의 헌법 수호이란 단지, 촛불한 광역교통망, 공공의료망. 전북의 경우에는 2036년 올림픽 유치에 전력을 다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호남을 위한 공약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지방의 교육·문화·의료혁신” 민주당 “18세까지 월 10만원 자립펀드”

>> 1면 ‘국민의힘, 결혼서비스…’서 계속

이어 청년 부동산 3종 공약(대학가 반값 월세존·오피스텔 종과대상 제외·생활불리 세대공존형 공급 확대)을 두고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저출생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다신청(다둥이·신혼부부·청년)’에게 주택을 0순위로 공급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 증식 프로그램으로 혜택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대기업 수준의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중·고·대 돌봄정책인 ‘돌봄학교’를 높게 평가하며 ‘시즌2’로 이어가 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 측은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해 사교육비 부담도 덜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저출생 해결 공약으로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육아지원금 1000만원 ▲과학기술 인재 확보 이민정책 ▲경력단절인 복귀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세 자녀 원리금·이자 감면 공약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을 돌고 있어 아직 후보별로 구체적인 저출생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저

출생 문제 해결을 10대 핵심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오는 27일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해당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저출생 해법 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에선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보충해 은행이 대출하게 하고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혜택을 주고, 둘째 출생 시 기존 혜택과 함께 원금을 50% 감면하며, 셋째 출생 시 원리금을 전액 감면하는 정책이다.

또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해 0~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정책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해 0~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정책도 제안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주택취득세 감면, 출산후가·육아휴직보장,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호 공급·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 33평형 분할전환 공공 임대 주택 제공 등을 공약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